



미국 :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 증가세는 한풀 꺾였으나 임금은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

2019년 8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조사를 가공하여 뉴욕타임즈가 분석한 결과, 최근 빠른 편이었던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이전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임금의 상승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19년 8월에 약 1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7월의 약 16만 개의 일자리 증가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약 2만 5천 개의 일자리는 정부가 총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고용한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의미의 일자리 수 증가세는 더욱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수치는 지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

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성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모멘텀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8월의 실질임금 상승폭은 7월의 임금 상승폭인 0.3%보다도 높은 0.4%로 보고되면서, 과연 위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3.7%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구인난이 일자리 수의 증가세를 줄였던 원인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자리를 잃은 산업에는 광업, 벌목, 소매 및 운송이 포함되며,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 일자리 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는 약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¹⁾

1) The New York Times(2019.9.6), "Hiring Slowed in August but Wage Gains Accelerated," Retrieved on September 6th,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06/business/economy/august-jobs-report.html>

미국 : 기업들의 노조 설립 여부, 노조의 실제 협상력보다 임금에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미국 기업들의 노조 설립 여부 자체보다는 노조의 실제 협상력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가 출판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노조 설립 여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던 이유는 노조들 간에 실제 협상력 간 차이를 측정

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기인한다. 이에 해당 연구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서 공개하는 노조 관련 정보를 모아 노조들의 실제 협상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조 조합비와 노조 교섭비(agency fee) 등을 포함한 노조의 연간 지출(spending), 그리고 파업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조의 연간 지출이 1% 증가할 때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0.15%에서 0.30%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노조의 구체적인 활동이 미국 노동부 자료에 기록된 해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에 유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노동조합 개설여부 등 단순한 변수가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던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유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발현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1) Wilmers, N.(2017), "Labor Unions as Activist Organizations: A Union Power Approach to Estimating Union Wage Effects," *Social Forces* 95(4), pp.1451-1478.

미국 :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로 핵심생산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감소

미국 핵심생산인구는 1960년대에 비해 일을 적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1969년에는 25~54세 남성 중 96%가 노동시장에 참가하였으나, 2015년 기준 해당 비중은 89%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노동부는 1960~1964년에 태어난 남성과 1980~1984년에 태어난 남성을 비교하여 왜 최근에 남성들이 일을 더 적게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세대를 떠나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산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노동부 수석 경제학자 도나 로드스테인(Donna Rothstein)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AFQT(군 입대 시 지능 등을 검사하는 시험) 점수, 낮은 교육수준 등의 특징을 지녔다. 특히 3분의 1가량의 노동시장 미참여 남성들은 흑인이었다.

먼저,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여파가 특히 이들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전에는 저학력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총량의 감소로 1980~1984년에 태어난 남성들은 그들 아버지 세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또한 최근 들어 감옥에 수감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핵심생산인구가 일을 적게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에게 있어 감옥에 수감되는 경험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의 훼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후 구직이 어렵다. 이 외에도 마약중독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만 4만 2천 명이 마약 과다투약으로 목숨을 잃었고, 마약이 노동시장참여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업무가 이민

자들로 대체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고려된다.¹⁾

1) VOA(2019.10.22), "Why Prime-Age US Men Are Working Less," <https://www.voanews.com/usa/all-about-america/why-prime-age-us-men-are-working-less>

미국 : 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뉴욕주 아마존 물류창고가 위치한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균 1분에 4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한다. 만약 그들이 정해진 휴식시간보다 몇 분을 더 쉬는다면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일 평균 10~12시간 동안 고강도로 업무를 처리한다. 뉴욕주 산업안전 및 건강위원회(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는 2019년 초부터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45명의 근로자 중 66%의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신체적인 통증을 느꼈고, 42%의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도 통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지도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위별로 발, 무릎,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조사자가 많았다. 또한 80%의 조사자가 근무지에서 더 빨리 일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느꼈고, 63%의 조사자가 현재의 근무행태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전체 근로자의 3%만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변인 레이첼 라이트리(Rachel Lighty)는 복스(Vox)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4천 5백 명의 근로자를 비롯하여 25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주 아마존 물류창고 근로자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아마존이 특급배송 정책을 시행한 이후 악화되었는데, 아마존이 타겟, 월마트 등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하루 만에 배송까지 완료하는 특급배송을 시작한 이후 근로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¹⁾

1) Vox(2019.10.18), "The problem with Amazon's speedy shipping, in one graphic," <https://www.vox.com/identities/2019/10/18/20920717/amazon-shipping-workers-injuries>



미국 : 6주간의 GM 파업 종료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street Journal)에 따르면, 2019년 10월 16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Workers Union, UAW)과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 Co, GM) 간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¹⁾ 그에 따라, 한 달여간 지속되어 온 GM 노동자들의 전국단위 파업이 해결 국면을 맞았다. 그리고 10월 25일, 4년간 유효한 단체협약 안에 대한 UAW 노조원들의 비준 투표 결과, 57.2%가 이에 찬성을 표시하면서 파업이 공식 종료되었다.²⁾ 6주 동안 지속된 이번 파업은 70년대 이후 GM의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다. UAW 부위원장 테리 디테스(Terry Dittes)는 “UAW GM 지부 노조원들의 희생과 용감한 자세는 미국의 노동계급을 괴롭힌 이중 임금구조(two-tier wages structure)와 정규직(permanent)-임시직(temporary) 격차 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였다”라고 자평하였다.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GM은 4년간 77억 달러를 미국 공장들에 투자하여 9,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호하는 한편 외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13억 달러를 오하이오 조립 공장 주변 시설에 투자하여 오하이오 공장 매각을 촉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4년의 단체협약 기간 중 초반 2년 동안 3%의 임금 인상, 나머지 2년 동안 4%의 보너스 지급을 하기로 했으며, 임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 경로를 만들고, 의료보험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46,00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3,000여 명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각각 11,000달러와 45,00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받

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때마다 각 노동자들에 1,000달러씩 지불하는 수익 배분(profit-sharing)을 12,000달러로 제한했던 방식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GM의 의료보험 혜택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Pittsburgh Post-gazette)는 로즈타운(Lordstown) 조립 공장 폐쇄를 막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 햄트래믹(Hamtramck) 공장을 유지하기로 한 점은 노조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³⁾ 또 3개 공장 폐쇄와 멕시코의 공장 증설 계획을 유지하는 등 사측의 성과도 있지만, 의료보험과 임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 경로 확보 등의 측면에서 노조가 얻은 성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UAW는 GM과의 협상 이후 포드(Ford Motor Co.)와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⁴⁾ UAW와 포드 모두 이달 초 만남에서 이미 많은 협상 이슈들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는 “포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임금(good-paying)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한 협약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포드가 지속적으로 노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GM 사례와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있다. 다만 포드 대표가 전기차(electric Vehicle) 부문의 경우 30%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볼 때, 전기차 개발이 노동자에 미칠 영향이 협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The Wallstreet Journal(2019.10.16), "UAW reaches tentative labor deal with GM," Retrieved on October 20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uaw-reaches-tentative-labor-deal-with-gm-11571240157>
- 2) CBS News(2019.10.25), "GM workers end 40-day strike after approving new labor contract," Retrived on October 25th, 2019. <https://www.cbsnews.com/news/gm-strike-update-united-auto-workers-vote-to-approve-new-contract-ending-40-day-strike-against-general-motors/>
- 3) Pittsburgh Post-Gazette(2019.10.22), "UAW got a good deal from GM, labor leaders, experts say," Retrieved on October 25th, 2019. <https://www.post-gazette.com/business/career-workplace/2019/10/22/UAW-got-a-good-deal-from-GM-labor-leaders-experts-say/stories/201910220036>
- 4) Reuters(2019.10.25), "UAW turns to Ford after GM workers approve new contract," Retrieved on October 26th,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autos-labor/uaw-turns-to-ford-after-gm-workers-approve-new-contract-idUSKBN1X32MK>

미국 : 시카고 교원 파업 돌입

2019년 10월 17일 25,000명이 넘는 시카고 교사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CBS 시카고(CBS Chicago)의 기사에 따르면, 시카고 교원노동조합(Chicago Teachers Union: CTU)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파업에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었다.¹⁾ 이에 대해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 시카고 시장은 파업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파업이 곧 끝나길 희망한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아이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도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에 대해 파업 참여 교사 린다 페랄스(Linda Perales)는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학생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핵심 이슈는 학급 규모와 더 나은 직원 채용으로 알려졌다. USA 투

데이(USA Today) 기사에 따르면, 시에서는 5년간 16% 임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학급 규모 축소와 저임금 직원들의 임금 인상, 더 많은 지원인력(간호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²⁾ 노조 대표 제스 샤키(Jesse Sharkey)는 시에서 더 진전된 제안을 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지원인력 확충 및 근로조건 개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지부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실망을 느낀 부분이 학교 지원인력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시카고 선타임즈(Chicago Sun-Times)에 따르면, 26일 협상이 파업 국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³⁾ 현재 양측은 입장 차를 조금씩 좁히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슈들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가운데 10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Elizabeth Warren)이 파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공교육 문제가 전국적인 정치적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1) CBS Chicago(2019.10.16), "Chicago public school teachers on strike; Mayor says, 'I hope this work stoppage will end soon,'" Retrieved on October 20th, 2019. <https://chicago.cbslocal.com/2019/10/16/no-school-thursday-as-cps-ctu-continue-negotiations-where-can-kids-go/>
- 2) USA Today(2019.10.22), "When will the Chicago teachers strike be over?" Retrieved on October 24th,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news/education/2019/10/22/cps-strike-update-chicago-public-schools-teachers-demands-elizabeth-warren/4064110002/>
- 3) Chicago Sun-Times(2019.10.25), "Is a teachers deal close? Both sides say Saturday a pivotal day in negotiations," Retrieved on October 26th, 2019, "<https://chicago.suntimes.com/2019/10/25/20932673/cps-strike-teachers-deal-close>

스웨덴 : 노조조직률 감소 지속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 77%에서 2018년 67% 2006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¹⁾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해는 2007~2008년으로 실업보험기금 가입비가 오르고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 해였다.²⁾ 현재 감소세는 주춤한 상태이나 최근 사회학자 안델슈 헬베리(Anders Kjellberg)는 2007~2008년 한 해 동안의 감소세가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2007~2008년 이후, 지역단위의 노조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며 노조대표자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새로운 조합원 확보 및 조합원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루칼라 노조는 조합원 감소에 있어 가장 큰 낙

폭을 보였던 노조였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주로 청년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이민노동자들이 블루칼라 직종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 집단은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낮다. 화이트칼라 노조는 블루칼라 노조에 비해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지만(각각 72%, 59%) 화이트칼라 노조 역시 최근 2년 동안 노조조직률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헬베리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노조조직률의 감소가 스웨덴 식의 단체협약 교섭방식에 위기를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주요 파트너인 사용자단체의 가입률은 여전히 높아(88%) 전통적인 단체협약 교섭의 틀 자체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³⁾

- 1) Kjellberg, A.(2019), *Den svenska modellen i fara?*, Arena Idé, Stockholm.
- 2) Eurofound(2019), "Union membership rates continue to fall," <https://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article/2019/sweden-latest-developments-in-working-life-q2-2019#footnote-RQerR-1>
- 3) Kjellberg, A.(2019), *Den svenska modellen i fara?*, Arena Idé, Stockholm.

스웨덴 : 퇴직연령 연장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2019년 10월 중으로 스웨덴 의회에서 퇴직연령을 높이는 법안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당(좌파당과 스웨덴 민주당 제외)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 법안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온건당의 당수이자 의회 사회보장 위원회의 대표인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Maria Malmer Stenergard) 역시 투표에서 난항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¹⁾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연금수급가능 연령은 61세에서 62세로 변경되며 근로가능연령(LAS 연령) 역시 67세에서 68세로 연장된다. 이 법안 도입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조정하는 첫번째 사례다.

법안 도입 후 현재 연금수령 가능연령인 61세, 근로가능연령 67세는 점차 상향되어 2026년에는 각각 64세, 69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스테네르가르드 의원은 현재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편이지만 현 인구의 2/3가량의 기대수명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녀는 질병수당, 실업급여, 주택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퇴직연령, 연금수령연령 변동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사회보장감독위원회(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 ISF)의 마츠 그라네르(Mats Granér) 씨는 퇴직연령 연장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에 속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에 속한 이들이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여성의 경우, 퇴직연령 전에 일을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퇴직연령 연장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라네르 씨는 연금수령자 중 최저보장연금(garantipension)만을 수령하는 이들이 이번 퇴직연령 연장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보장연금 수령 연령 역시 2023년까지 65세에서 66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1) The Local(2019.10.13), "Why Sweden is set to raise retirement age - and how it will change," <https://www.thelocal.se/20191013/why-swedens-parliament-is-set-to-raise-retirement-age-and-how-it-will-change>



영국 : 영국노총 사무총장, 브렉시트 합의안이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 이하 ‘법안’)을 발표했으나, 프란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 영국노총(Trade Union Congress: TUC) 사무총장은 이 법안이 근로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무의미하다(meaningless)’고 비판하였다.¹⁾

법안에 따르면 현행 EU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 파견 근로자 규정(Agency Workers’ Regulations) 등의 근로자 권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끝나고 나면, 근로자 권리와 관련한 EU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영국 법에 반영할지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대해 TUC 사무총장은 영국 근로자의 권리를 EU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영국 하원이 동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 이행 등을 위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근로자 권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나, 과거 행보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 없이는 이 발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니콜라 스테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도 법안 중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섹션에 대해 “향후 법안이 근로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장관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근로자 권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브렉시트를 통한) 통제력 회복의 요점”이라고 반박하면서, 영국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EU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1) Independent(2019.10.22), “Don’t be conned: Boris Johnson’s Brexit deal is ‘meaningless’ on workers’ rights, union chief warns,”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boris-johnson-brexit-deal-workers-rights-labour-withdrawal-bill-tuc-vote-a9165891.html>

영국 : 영란은행, 영국 내 소수 민족 근로자의 임금이 백인에 비해 10% 정도 낮다고 분석

영국 통계청(ONS)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활용한 영란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및 직업의 특성들을 통제했을 때,

영국 내 소수 민족 근로자의 임금은 백인에 비해 10% 정도 낮았다. 또한 이와 같은 민족별 임금격차는 성별 임금격차와 달리 지난 25년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보고서의 저자인 앤드류 홀데인(Andrew Haldane)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내 민족별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만큼 심각하다면서, 현재 의무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보고하고 있는 근로자 수 250인 이상 회사로 하여금 민족별 임금 격차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별 임금 격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인 및 중국인 임금의 경우 백인에 비해 각각 7% 및 6% 낮았고, 흑인 및 파키스탄인들의 경우는 13% 낮았으며, 방글라데시인들은 20%나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는 영국 내 소수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자는 민족별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 및 직업의 특성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그 차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집단 간 교육 및 기술 차이가 뚜렷하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집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집중되는 원인이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반영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시장 및 정책의 실패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Independent(2019.10.21), "Ethnic minorities in UK earn 10% less than white workers, Bank of England research shows,"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ethnic-minority-pay-gap-uk-bank-of-england-research-bame-a9165071.html>

프랑스 : 임금노동자 평균임금, 최저임금보다 빠르게 증가

인력관리(HR) 컨설팅 전문업체인 랜스타드(Randstad)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내 임금노동자(관리자 제외)의 임금이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월평균 1,636유로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SMIC)이 1.5% 인상된 것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성장률(2018년 1.7%, 2019년 전망치 1.3%)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업이 인력채용 시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¹⁾

공업 부문이 3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인상(2%

되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1.6% 인상되어 건설업이 여전히 가장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남아 있다”고 랜스타드는 설명했다. 건설업 부문의 월평균 급여는 1,724유로에 달하는 반면, 공업은 1,644유로, 서비스업은 1,602유로이다. 물론 이것은 평균값으로 산업 내 모든 노동자가 같은 임금증가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2% 증가한 1,663유로를 기록했으며, 미숙련노동자(평균 1,601유로), 사무직원(평균 1,601유로) 그리고 중간관리자(평균 1,869유로)의 평균임금은 각각 1.7%, 1.7%, 1.3% 증가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살펴



보면 기계공의 평균임금은 7.1% 급증하여 1,844유로에 이르렀다. 트럭 운전자의 평균임금은 6.5% 증가하여 1,684유로를, 기술자의 평균임금은 6% 증가한 평균 1,902유로를 기록했다. 영업사원과 은행

원의 평균임금 또한 5% 이상 인상되었다. 이 통계는 2019년 상반기에 고용된 임금노동자 150만 명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1) Les Echos(2019.10.17), “La France parmi les pays qui dépensent le plus pour la protection social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la-france-parmi-les-pays-qui-dependent-le-plus-pour-la-protection-sociale-1141918>

프랑스 : 실업보험 개혁

2019년 11월 1일부터 프랑스 실업보험제도가 크게 변경된다.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난 24개월간 130일(910시간 또는 6개월)간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기존에는 28개월간 88일). 또한 최초 신청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의 경우 신청 전 최소 6개월간 근로이력이 요구된다(기존에는 1개월). 그리고 고임금 실업자의 실업수당 지급액이 감소하게 된다(실직 전 월 총소득이 4,500유로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7개월째부터 수급액 30% 삭감).

그리고 이번 실업보험제도 개정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도 6개월간 800유로의 실업급여(지난 2년간 1만 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자에 한해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는 실업급여 월지급액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더 큰 변화를 계획 중이다. 실

업급여 월지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급여가 기존 실직 당시 임금에서 (지난 24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으로 개정되며, 지급액 한도도 월 7,700유로에서 월평균 임금의 65%보다 낮지 않는 수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 첫해에 실업자로 등록된 850,000명 기준 24개월 기간 중 25~49% 사이 기간만 근로한 190,000명의 실업급여 월지급액은 431유로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현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 월평균 지급액 868유로에 비해 50%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50~74% 사이 기간을 근로한 사람들(280,000명)은 897유로에서 24% 감소한 679유로를 지급받을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929유로에서 6% 감소한 869유로를 지급받을 것이다. 노조들은 개혁이 취약계층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노동부는 새로운 규칙이 ‘신규 실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²⁾

- 1) The Local(2019.10.30), "How your unemployment benefits will change in France from November 1st," <https://www.thelocal.fr/20191022/what-changes-for-unemployment-in-france-from-november-2019>
- 2) Les Echos(2019.9.24), "Réforme de l'assurance-chômage : les syndicats ne désarment pas,"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reforme-de-lassurance-chomage-les-syndicats-ne-desarment-pas-1134356>

중국 : 북경시, 기능노동자 양성을 위한 정부보조금 확대

북경시는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높여서 2021년 까지 전체 취업인원 중 기능노동자의 비중을 30%로 높이고, 기능노동자 중 고기능노동자의 비중을 33%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

10월 9일 북경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북경시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2019~2021)」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통해 북경시는 첨단 기술 산업 및 금융, 문화 산업 등과 같은 중점 산업과 도시 운영에 관한 영역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게 된다. 이후 3년 동안 기업 노동자들과 일부 노동자 및 구직자들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된다. 현재 북경시의 기능노동자는 총 338만 명이고 고기능노동자는 99만 6천 명이다. 이번 방안은 북경시가 보조금의 범위와 액수를 늘려서 기업에서 긴급히 필요한 고기능노동자의 교육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실시되면, 기술의 시급한 정

도와 직업 등급에 따라 매년 1인당 인민폐 5,000위안에서 8,000위안까지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 된다. 그리고 기능전수교육, 기술혁신, 기능교류 등의 활동에도 각 활동마다 인민폐 30만 위안 이하의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된다. 2019년에는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정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북경시는 실업자, 농민공, 퇴역군인,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경비원, 배송노동자 등과 같은 중점 취업집단에 대해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높이려 한다. 또한 각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 교육훈련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업학교는 교육훈련 제공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는 300여 곳의 사립 직업훈련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 中國法院網(2019.10.9), 「北京加大政府補貼力度培養技能型勞動者」,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9/10/id/4502197.shtml>



베트남: 2020년부터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연금 납입기간 연장

베트남의 현행 사회보험법(2014)의 일부 주요 규정이 2020년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들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 5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동법 제55조 제1항은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연금 수급연령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남성 만 51세, 여성 만 46세 이상의 노동자가 동법 기준에 따라 노동력 61% 이상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 수급자격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남성 만 55세, 여성 만 50세로 변경된다. 둘째, 동법 제74조 및 제56조에 따라 2019년까지 법정 은퇴하는 남성 노동자는 17년간 연금 납입을 하는 경우 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나 2020년부터

는 이것이 18년으로 변경된다. 참고로 여성은 변경 없이 연금 납입 연수 15년으로 계속 일괄 유지된다. 셋째, 동법 제6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은퇴 전 20년의 사회보험 납입 연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로 2016~2019년에 가입한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입 연수는 15년이다. 넷째, 동법 제96조에 따라 현재의 사회보험증이 2020년까지 사회보험카드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9조 사회보험 현대화 사업에 따라 모든 사회보험 정보가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운영된다.

1) 베트남 호치민시노동조합 기관지 '노동자'신문(2019.10.17), "5 thay đổi cần lưu ý trong chính sách BHXH từ năm 2020," <https://nld.com.vn/cong-doan/5-thay-doi-can-luu-y-trong-chinh-sach-bhxh-tu-nam-2020-20191017073840516.htm>

베트남: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기술훈련 마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직업교육국)는 자국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차량호출)를 운영하는 Be Group과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기타 업무 직원 포함)의 직업훈련, 기술교육, 인정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¹⁾ 이로써 베트남에 정부와 차량공유서비스사의 인력개발을 위한 최초의 전문적인 교육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현

재 베트남에서는 차량공유 및 호출, 앱(app)과 같은 플랫폼 약 380여 개를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는 횟수가 무려 30만 건에 다다른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비롯한 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 및 직업, 서비스 교육의 공급은 전무한 상태이다. 베트남 언론사 중 하나인 VnExpress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의 약 72%가 해당 서비스의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교육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해당 산업 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운전 노동자들은 일일 6~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도 온전히 수혜받지 못하며, 교통사고 및 범죄, 공

해, 건강질환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표준화하고 해당 경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체계 안으로 점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홈페이지 뉴스(2019. 10.10), “Chuẩn hóa nghề tài xế công nghệ tại Việt Nam,” <http://www.molisa.gov.vn/Pages/tintuc/chitiet.aspx?tintucID=220692>

호주 : 가계 저축 및 노동생산성 하락세로 향후 경기침체 전망

호주 통계청은 2018~19 회계연도(2018.7~2019.6) 기준으로 호주 가계 총저축이 지난 4년간 대폭 감소하여 2006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¹⁾ 전년대비 78억만 호주달러 감소하였고 2014~15 회계연도 이래로 총 464억만 달러 감소하였다.

주 원인은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소득세율이 꾸준히 인상되어 가계 실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과 정책입안자들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임금 상승률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임 재무장관 스티브 케네디도 지난주 연설을 통해 호주 경제 내 임금 인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통계청 데이터 또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가계 저축 하락세는 ① 그간 소득세율 인상률이 매우 높았고, ②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우

준히 증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③ 노동소득분배 및 주택소유에 대한 총임여금이 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생산성 또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회계연도 2017~18 대비 0.2% 감소했고 다 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지수²⁾는 0.4% 감소하여 2010~11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호주노동조합연합(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비서관 셸리 맥마너스는 근로자들이 지난 7년간 충분한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해서 가계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호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이러한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10.25), "Households slash savings by \$46b as income share dips to 10-year low,"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households-slash-savings-by-46b-as-income-share-dips-to-10-year-low-20191025-p5348w.html>
- 2)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지수.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호주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휴가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¹⁾ 또한 근무환경 특성상 다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도 흔치 않고 노동조합이나 인사가팀이 있는 경우도 드물어, 근로자들이 단체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박사과정생 마이클 워커(Michael Walker)는 호주 우버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uberpeople.net에 등록된 수천 개의 글을 분석했다.²⁾ 분석 결과, 우버기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근무

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한 뒤 자발적으로 단합하는 단체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팀이나 경험을 공유하여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종의 기존 노동조합이나 인사가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워커는 각 이코노미에 노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부당한 근로조건에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전체 근로자 중 7% 이상이 각 이코노미 종사자이고 대부분이 차량공유서비스업에 종사한다. 또한 종사자 대부분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남성으로 학생, 호주 임시거주자, 장애인 및 이민자들이 주를 이룬다.

- 1)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7월호(Vol.17. No.7) 호주 소식 참조.
- 2)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10.18), "Workers find a way to make themselves heard," <https://www.smh.com.au/business/workplace/workers-find-a-way-to-make-themselves-heard-20191016-p5317o.html>